

# 줄세우기? 깜깜이 방지?...나주시장 후보자 압축 논란

### 민주 나주시역위 '후보자 난립...유권자 알권리 위한 교육책' 일부 후보자 '공천권 없는 지역위가 당헌·당규 무력화' 불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선거판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고층에 이어 나주에서도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주도로 예비경선을 거쳐 지방선거 후보자를 압축키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공천 권한도 없는 지역위가 당헌·당규를 무력화하면 서까지 예비경선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후보자 줄세우기 아니냐"며 "중앙당과 도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나주시역위는 16명에 이르는 시장 후보자 난립 상황에서 '깜깜이' 경선을 막기 위한

지역위 차원의 교육지책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10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는 지난 6일 혁신도시 한 행사장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주화순지역위는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증·정책발표·토론회 평가 등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립적인 인사들로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려 이들에게 서류 검증과 역량 평가를 맡기고, 일련의 과정을 유권자들에게 유튜브 중계 또는 현장 공개 방식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

혔다. 이를 위해 19일까지 출마의 변, 의정(공직) 활동 계획, 주요 공약, 부동산 보유 기록, 전과 기록, 탈당 경력 등을 나주시역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나주시역위의 예비경선 시행 방침에 출마예정자들은 일제히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다만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 지역위원장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공개 반발은 삼가는 기류다. 시장 출마 예정자 A씨는 "당헌과 당규 등에 따라 공천 관리는 전남도당 소관"이라며 "권한 없는 지역위가 유권자 알권리를 내세워 후보자 줄세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B후보자는 "백번 양보해서 교육·보상·상충·간직지역위가 최근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압축한 선례가 있다고 해도 고층은 무소속단체장지역 아니냐. (현직시장)이 민주당 인사

나주와 달리 최소한의 명분은 있지 않느냐"며 "나주·화순지역위가 화순을 제외하고 나주에서만 예비경선을 추진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장 출마 예정자 C씨 역시 "예비후보자 지위도 갖고 있지 않은 출마예정자들을 압박해 강제로 합의를 끌어내고, 현역 단체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후보자들을 압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원칙을 훼손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장 출마예정자 D씨는 "내년 2월 18일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법과 당헌·당규를 지켜가며 자유로 온 물고기처럼 마음껏 헤엄치며 유권자와 호흡하고 싶다"며 중앙당과 도당이 지역위 결정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강인규 시장을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이에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꾸려진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비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출마예정자들에게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다"며 "대선에 가려져 깜깜이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아니라, 유권자와 함께 호흡하며 뛰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부 후보자 반발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인 신정훈 의원 역시 "나주시장 후보자만 16명에 이르는 데 대선에 가려져 후보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깜깜이 선거가 온당한가"라고 반박하면서 "지역위에서 추진하는 모든 절차는 도당 승인과 후보자 합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발언하는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여가부 '대선 공약발굴' 논란 격돌

### 야 "장·차관 관여 관련선거" 여 "정책개발 말라는 거냐"

여야는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이른바 '대선 공약 발굴' 논란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선관위가 '공약 발굴' 의혹과 관련, 산업부 1차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을 거론하며 "산업부만 해도 개인의 일탈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가부에서는 장관과 차관이 다 관여해서 민주당을 위한 공약 개발을 했다"며 "전 정부적인 관련선거가 이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책임을 물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산업부 1차관(박진규)과 여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전 부처에 대한 직무감찰을 해서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얼마나 짜질하면 정부에다 대고 공약개발을 해달라고 했을까"라며 "참 딱하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제가 지금 여가부 회의를 하러 왔는데, '대선공약을 하느냐' 등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언들이 있었다"며 "(이런 논란은) 실무자 간의 다소 오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 부처가 정책 개발과 수립, 계획도 갖지 말라는 소리냐"며 "오히려 정부가 여러 정책제안을 (국회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김병주 의원은 임이자 의원의 '짜질' 발언을 두고 "비판만 하면 되는데 왜 비난을 하느냐. 다른 당에 짜질하라는 단어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여야간 공방이 거듭되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약을 개발해줬다는 것은 오해"라며 "정책 자료집을 각 당에 주자고 한 것이고, 오늘 오후 3시쯤 각 당에 전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에 필요한 정부 협조 차원의 참고자료인 만큼 공약개발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며 "다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광주시당 내년 지방선거 기획단장 운영덕 의원 내정

### 서구을 지방선거까지 시당 운영 청년·여성 특구 만들어 공천 배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기획단장에 운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을 내정하고, 여성·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사고위원회로 확정된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회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당에서 직접 관리하기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10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송갑석(서구갑)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운영덕·이병훈(동남을)·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이용

빈(광산갑)·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모임을 갖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구를 만드는 등 이들의 '풀뿌리정치' 참여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또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윤 의원을 기획단장으로 내정해 전반적인 경선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최근 광주시당이 진행한 정치 신인 아카데미인 '슬기로운 정치생활 광주시당 지방자치 아카데미'에 106명이 몰려드는 등 그 어느때보다 지방선거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모임을 통해 "공정 경선을 위한 틀을 만들고 신인과 청년, 여성들이 지방

자치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국회의원은 "공정 경선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청년과 여성을 전진배치할 것"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사무소 보좌진 성폭행 사건 2차 가해 의혹을 받아 탈당한 양항자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구을을 사고위원회로 확정하고 당분간 광주시당에서 관리하는 안에 동의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6일 오전 제41차 회의를 갖고 광주 서구을과 서울 강남구영, 부산 동래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4곳을 사고위원회로 확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민의힘 '피선거권 18세' 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회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 경주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 선거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헌법 불합치 받은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 등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발목펌프

특허받은 표준형

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각종 성인병을 완전 해결시켜줍니다.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0cm 편백나무 반원에 운동하는데 층간소음에 지장이 없는 운동효과가 확실한 특허 표준형입니다.

-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운동기구
- ★특허등록 제30-0636197 발목운동기구

표준형 발목펌프+타이머 **가격 40,000원**

표준형 발목펌프 **가격 25,000원**

편백경침 스폰지 부착 **가격 13,000원**

**제일건강 010-7510-2000**  
광주 남구 서문대로 687 수협 2층

## 2022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 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사형)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신학인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래밍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구분	일시(기간)	장소 및 안내사항
입학원서 작성(인터넷으로 작성)	2021. 11. 9.(화) 09:00 ~ 11.24.(수) 18:00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http://gsit.jnu.ac.kr) 원서 작성(일련) 후 원서 등을 출력
구비서류 제출(학점명부 또는 무명 제출)	2021. 11. 9.(화) 09:00 ~ 11.24.(수) 18:00	• 제출장소: 산업대학원 행정실(공과대학 4층관 202호)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우61186 • 출력한 입학원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 및 전령로 납부 영수증을 제출
전형일시	2021. 12. 7.(화) 10:00 ~	• 지리학과(전공)에서 지정한 장소(신분증 반드시 지참)
합격자 발표	2021. 12. 22.(수) 10:00 예정	•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신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150평, 200평, 500평, 950평),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 010-6670-9800